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System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 Focused on Income Classification -

전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이승신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ous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Lee, Seung Sin

『목 차』

I. 서 론	IV. 결과분석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및 요약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factor for househol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financi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For this, the income level is classified by comparative poverty and analyzed the influence power. The data for this study was "the Korean Labor Panel"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in 2000.

The result showed the demographic factors by the income leve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have big difference. Also, income level affect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lower income level, demographic factors affect more than financial factors. This result explaine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s luxurious goods. For middle income level, financial factors affect more than demographic factors. This explaine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s choice goods. For upper income level,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as explained as investment goods.

주제어(Key Words): 사교육비지출(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소득계층(income level), 가계재무구조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Corresponding Author: Seung Sin Lee, Dep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ersity, Whayang-dong, Kwangjin-gu, Seoul, Korea, 143-914 Tel: 82-2-450-3778 Fax: 82-2-444-1058 E-mail: Lchung@konkuk.ac.kr

* 본 논문은 2002년도 전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I. 서 론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가계의 제1의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계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과외비 규모는 2000년에 들어서 이미 7조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사교육 대상 자녀를 둔 가구의 66.6%가 과외를 시키고 있었으며 가구당 월평균 37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02. 5. 23).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가계 측면에서 보아도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1996년도의 가계지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였으나 2000년 현재 12.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교통통신비와 함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비목이었다(통계청, 2002).

이러한 증가는 최근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연령이 낮은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사교육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가계의 부담감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불건전한 가치관, 계층간의 위하감 등의 조성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의 복지증진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계가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족원의 특성, 가치관, 목표, 그리고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사교육지출행동은 다른 필수적, 기본적 비목지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의 소비는 각기

다른 소비항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소비항목들로 구성되고 소비항목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소비지출의 각 항목은 가계의 총체적 복지에 영향을 주며 각 지출비목들은 통합된 전체의 부분이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항목의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손상희, 1993). 또한 소비항목들간의 상충효과 및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타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정영숙, 1996).

따라서 각각의 소비항목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항목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타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개별소비항목의 욕구충족에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의 흐름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이때, 교육투자의 수익률은 교육투자를 결정하고 개인의 임금 및 미래 소득향상과 사회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계는 물적자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가계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계의 사교육지출은 미래 가계의 예상수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투자의 개념이기보다는 가계소득이나 필수적 비목지출에 의해 탄력적으로 소비되어져야 할 선택적 비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계의 안정적인 지출구조를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교육비지출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첫째,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분야(김시월, 1999; 김숙, 1996; 김인숙·여정성, 1996)가 있고 둘째,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문숙재·김성희, 1995; Schwenk, 1986; Espenshade, 1984; Lino, 1990; Turchi, 1975; 김인숙·

여정성, 1996; 김시월, 1996; 박배진, 1997; 허경옥, 1996; 이승신, 2002)이 있으며 세째, 사교육비지출이나 부담감이 가계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야(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박배진, 1997; 황순덕, 1993; 이동원, 1996; 윤성인, 1997; 김시월, 1999; 이승신, 2002) 등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거나 사교육비지출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가계의 경제적 변인이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많은 가계라 할지라도 소비지출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적자수지상태를 나타내며 가계의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가 이를 상회한다면 총자산은 마이너스의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교육비지출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경제적 변수로서 가계의 재무구조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순자산의 합계인 자산상태와 가계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수지상태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재무구조의 전정성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재무비율이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통한 복지달성이라는 가계목표에 부합한 사교육비지출을 위해서 가계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계의 개별 경제요인보다는 재무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산상태와 수지상태,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적용하고 상대적 빈곤선에 기반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소득계층의 구분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득을 고려해 볼 때,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류상영·강석훈, 1999)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

분으로 저소득층을 중위소득의 50%,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 부유층을 중위소득의 15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한 소득계층 구분방법으로, 상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한 실제적 빈곤선 설정방법은 국민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50%)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연구자들에 따라 50%로 정한 경우도 있고, 높기는 66%, 80%까지 그 선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소득의 50%,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33%이하를 빈곤으로 잡고 있고, OECD는 40%를 정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를 정하고 있다(OECD, 1994).

한편,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 가구별로 가구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소득을 가구동등화 지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변형하여야 할 것이다. OECD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가구소득이나 가구지출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동등화된 소득이나 소비수준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있다(김진욱·박창원, 2001).

$$\text{가구동등화지수(혹은지출)} = \frac{\text{가구소득(혹은지출)}}{\sqrt{\text{가구원수}}}$$

2. 가계재무구조

가계재무관리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자원을 획득, 효율적으로 소비 및 보전하고 증대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기대하는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다(이연숙 외 2000). 이러한 가계의 재무관리는 재정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위기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사교육비지출도, 재무관리적 차원에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행동과 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와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나며 사교육비 지출행위도 상이하게 될 것이다. 가계재무관리의 목표가 가계목표의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가계의 사교육비지출행위도 재무 관리적 요소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첫째, 자산상태, 둘째, 수지상태, 셋째, 여러 재무 비율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산상태표는 가계의 자산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표로서 가계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나타내준다. 자산상태표를 통해 자산이 각각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느 한 분야에 과잉 대비하는 반면 다른 분야에는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은지, 한 종류의 자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부채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부채는 어떤 것인지 검토할 수 있

다. 자산이란 부채와 순자산의 합계로서, 값어야 할 부채로 구입한 재산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자산의 합에서 빼을 뺀 남은 금액을 계산해서 순자산을 구하는데 이 순자산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자본이다(이기춘외, 1999).

한편,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계수지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가계수지상태표는 집 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가계부와 비슷하며, 수입, 지출, 손익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기간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지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로, 가계재무상태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가계수지상태표로부터 어떤 부분을 저축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손익결산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으로 그 값이(+), 즉 혹

<표 1>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재무비율

해당지표	비율종류	재무상태평가
자산상태	① 총자산/총부채	부채상환능력: 자산으로 부채를 갚기에 충분한가 1>일 경우, 지급능력이 충분 1<일 경우, 부채상환불가능
	② 유동자산/단기부채	단기간내에 얼마나 빨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 값이 클수록 안전한 재무상태
	③ 투자자산/순자산	자산증식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가 은퇴시점에서는 자산의 최소 25%정도가 투자자산이어야 한다.
수지상태	④ 연부채상환금 /총년간소득	년소득중 상환해야 할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값이 클수록 부채부담이 크다. 30%이하여야 함. 주택용자와같은 장기부채도 포함.
	⑤ 연부채상환금 /총년간세후소득	세금을 공제한후 가처분소득중 차지하는 부채상환부담. 40%이하일 경우에 다른 지출을 위한 융통성을 가짐
	⑥ 주택외부채상환금 /총년간소득	주택이외에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비율로서 20%이하가 안전.
자산상태+수지상태	⑦ 유동자산/월지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비상시대비를 위해 월지출의 3~6배의 유동자산을 필요.
	⑧ 년간저축+투자 /년간소득	가계의 저축 및 투자와 년간 소득과의 관계를 파악. 소득의 몇%를 미래소비를 위해 지출하는가?
	⑨ 유동성자산+비연금투자자산/연간총소득	연간총소득에 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 실업이나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해 장기간 소득이 없을 경우 얼마만큼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지표. 50%이상일 경우가 적절함.

자료: Garman E. T.(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자일수도 있고 (-). 즉 적자일 수도 있다(정순희, 2003).

또한,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자산상태와 수지상태를 통해 산출되어질 수 있는데 이의 종류와 평가내용은 <표 1>과 같다.

3. 가계 사교육비지출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은 사교육비를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관련 경비로서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구독, 방과후 보충수업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이용할 때 따르는 비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교육비지출은 공교육비를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등에 지출되는 가계비용의 총합계를 말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편, 우리나라가계 사교육비지출실태를 살펴보면, 통계청(2001)이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 1000원, 한집 당 교육비지출은 한달 평균 37만 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신(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평균 149,273원이며, 11~20만원인 경우가 30.7%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만원 이하가 21.8%이며, 21만원 이상인 경우도 14.6%정도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를 보면 약간 부담된다고 한 경우가 25.3%, 매우 부담된다가 23.4%로 전체의 절반정도는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성립(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가계의 평균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명목가치로 103,509원으로 1982년 수준과 비교하면 19배, 1990년 수준의 3배 이상이며, 11.4%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 우리나라 가계교육비 지출 수준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사교육비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관련변수고찰

1) 사회인구학적특성

박상학(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를 시키는 비율이 높고, 자녀의 과외이용 결정은 대부분 부모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과외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결과로 주부의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최승애, 1985; 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금, 1997).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숙재외(1996)에서 교육비지출은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승신(2002)에서는 자녀가 취학전,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박미희·여정성(2000)에서는 한 자녀 가계보다는 두 자녀 가계에서 가계가 사교육비지출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집단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나 자녀 한 명을 위한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다(Becker, 1993; Lino, 1990). 반면 자녀수는 공교육비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정영숙, 1996).

주부의 연령과 첫 자녀의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즉 첫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자녀의 요구가 감소되므로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금전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문숙재·김성희, 1995).

또한 막내자녀의 연령은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시간투자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Schwenk, 1986; Turchi, 1975).

이승신(200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유형, 주부의 연령,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자녀수, 자녀의 연령, 거주지변수에서 월평균사교육지출액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로 볼때, 주부이 연령과 학력, 직업형태, 거주지역, 가구원수, 자녀수 등이 사교육비지출과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가계재무관련특성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힌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매우 중요한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정영숙: 1997, 유형선·윤정혜: 1999, 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

가계소득은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를 위한 주부의 시간투자가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한 연구들이 많았다(김인숙·여정성, 1996; 김시월, 1996; 박배진, 1997).

정영숙(1996)은 가계의 소득수준과 유동자산이 증가할수록 교육비지출이 증가하며, 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량에는 부모의 특성보다는 자녀변수와 투자능력을 나타내주는 재정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재정변수에 따른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을 보면 월평균총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 총소비액이 많을수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총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자녀의 인적 자본형성을 위해 많은 금전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소득계층별 가계의 재무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소득계층별 가계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특성과 가계재무구조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인 2000년도의 data의 응답자중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즉, “한국노동패널” 2000년도 3차조사 data중 가구용과 개인공통 data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중 가구용 data는 우선 1998년 최초 조사시부터 2000년도 3차조사까지 3년 연속 모두 응답한 대상 가계만을 대상자로 하였다. 2차로 성별이 여성이고 가구주와의 관계가 본인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현재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동거중이며 연령이 20세이상 55세이하인 조건에 맞는 가구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가구용 data 추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data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선별된 data를 통합시켜 최종 조사대상 가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노동패널”의 패널로 참가한 가계중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으로서 현재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동거중인 가계로 한정한 결과, 최종 1950가계를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설문지중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유

형 및 상태, 주거형태, 주택자가여부, 거구지역, 가구원수, 자녀수 등 총 9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중 직업상태는 취업, 부업, 전업주부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주거용주택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경기, 기타시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자산상태, 수지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관련문항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으로 구성하고 부채관련문항은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개인적으로 빌린돈,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계, 기타 등으로 구성하고 금액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순자산규모를 산출하였다. 가계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관련문항은 년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하여 총소득을 산출하고 지출관련문항은 난생활비와 난저축액으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금액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가계의 수지상태를 파악하였다.

한편,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본 연구의 이론적고찰에서 살펴본 것과, 총자산/총부채, 투자자산/순자산, 연간총부채/총연간소득, 주택외부채상환금/총년간소득, 유동자산/월지출, 연간저축과 투자/연간총소득 등 총 6개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교육비지출은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과 보육기관의 이용을 말하는 것으로, 한달평균 사교육비지출금액의 총합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이상의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Window용 SPSS 10.0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기법으로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카이제곱,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소득계층의 분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월평균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의 구분은 류상훈·강석훈(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위소득인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하고 중위소득의 50%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산층이 66.6%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152만8천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21.2%정도로 평균월소득이 351

<표 2> 소득계층의 분류

평균의 단위: 천원

		빈도	월평균소득의 평균	표준편차	F	Duncan
소득계층	저소득층	238(12.2%)	43.05	24.87	1369.96***	a
	중소득층	1299(66.6%)	152.81	42.40		b
	고소득층	413(21.2%)	351.732	153.00		c
	합 계	1950(100.0%)	2178	1491		
가구동등화 소득계층	저소득층	237(12.2%)	43.76	26.00	1299.72***	a
	중소득층	1315(67.4%)	154.39	45.17		b
	고소득층	398(20.4%)	353.32	159.12		c
	합 계	1950(100.0%)	2178	1352		

***P<.001

만7천원, 저소득층은 12.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은 43만5천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의해 구분된 세집단은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여 ($F=1269.96$, $p<.000$) 소득수준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과 1999년 각각 한국노동패널 1, 2차조사에 따라 나타난 결과(김진욱·박창원, 2001)를 보면 저소득층이 각각 8.5%, 10.1%인 것에 비해 본 조사결과 나타난 저소득층은 12.2%로 증가한 것을 볼 때, 해마다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저소득층은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경우, 가구원수를 하나의 균등한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1인가구의 경우 월급으로 100만원을 수령한다면 저소득층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나 5인 가구가 월100만원의 소득수준이라면 이가구는 저소득층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근거한 가구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고려하여 균등화된 소득을 도출한 후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OECD, 1994).

이상과 같이 가구동등화소득을 산출한 결과 소득계층별 분포와 월평균소득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소득계층과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의 비중은 동일하나 중소득층이 67.4%로 약간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이 20.4%로 감소하였으며 소득계층간 월평균소득액수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F=1299.72$, $p<.000$)를 보였다.

한편, 저소득층의 월평균소득액수는 43만7천원정도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의 바탕이 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이 작성된 2000년 우리나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3만3731원, 2인 가구 55만2712원, 3인 가구 76만218원, 4인 가구 95만6250원, 5인 가구 108만7256원, 6인가구 122만6868원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0). 본 조사결과, 나타난 저소득층의 월평균소득(2인가구 15만8천원, 3인가구 36만5천원, 4인 41만9천원, 5인가구 52만9천원, 6인 가구 62만5천원)은 2000년 우리나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소득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소득계층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유형, 직업상태,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자녀수, 거주지역, 자녀의 연령 등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주부의 교육수준은 저소득층의 경우, 중졸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득층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가, 고소득층에서는 전문대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득계층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에서는 35세이하인 경우는 중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45세이하 집단에서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았다. 주부의 직업유형은 임금금로자나 비임금근로자 모두 고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직업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직업상태를 살펴보면 fulltime, partime 모두 고소득층에 속하는 주부의 비중이 많은 반면, 전업주부집단은 빈공층과 중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주택의 자가여부에서는 자가에 응답한 대상자중 고소득층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전세 및 월세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계층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종류에서는 단독주택은 중소득층, 아파트는 고소득층,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계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한명인 경우는 고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두명은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 세명 이상은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 소득계층간 차이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비중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은 저소득층, 경기지역은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 및 근거리에 거주하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많았고 광역시 및 지방에 거주하는 비중은 빈공층에서 높게 나타남을

<표 3> 소득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χ^2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89(37.6%)	371(28.2%)	53(13.3%)	513(26.3%)	165.165***
	고졸	122(51.5%)	759(57.7%)	185(46.5%)	1066(54.7%)	
	전문대졸이상	26(11.0%)	185(14.1%)	160(40.2%)	371(19.0%)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주부의 연령	35세 이하	79(33.3%)	568(43.2%)	141(35.4%)	788(40.4%)	14.100**
	45세 이하	140(59.1%)	643(48.9%)	221(55.5%)	1004(51.5%)	
	55세 이하	18(7.6%)	104(7.9%)	36(9.0%)	158(8.1%)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주부의 직업유형	임금근로자	70(29.5%)	328(24.9%)	140(35.2%)	538(27.6%)	26.174***
	비임금근로자	34(14.3%)	247(18.8%)	86(21.6%)	367(18.8%)	
	미취업자	133(56.1%)	740(56.3%)	172(43.2%)	1045(53.6%)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주부의 직업상태	fulltime취업	76(32.1%)	429(32.6%)	165(41.5%)	670(34.4%)	23.866***
	partime취업	28(11.8%)	153(11.6%)	65(16.3%)	246(12.6%)	
	전업주부	133(56.1%)	733(55.7%)	168(42.2%)	1034(53.0%)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자가여부	자가	3(8.8%)	50(27.3%)	24(38.1%)	77(27.5%)	17.460**
	전세	20(58.8%)	105(57.4%)	34(54.0%)	159(56.8%)	
	월세	9(26.5%)	18(9.8%)	4(6.3%)	31(11.1%)	
	기타	2(5.9%)	10(5.5%)	1(1.6%)	13(4.6%)	
	전체	34(100.0%)	183(100.0%)	63(100.0%)	280(100.0%)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8(23.5%)	44(24.0%)	8(12.7%)	60(21.4%)	14.420*
	아파트	10(29.4%)	80(43.7%)	39(61.9%)	129(46.1%)	
	연립 및 다세대	14(41.2%)	42(23.0%)	11(17.5%)	67(23.9%)	
	비주거용주택	2(5.9%)	17(9.3%)	5(7.9%)	24(8.6%)	
	전체	34(100.0%)	183(100.0%)	63(100.0%)	280(100.0%)	
자녀수	한명	86(36.3%)	442(33.6%)	148(37.2%)	676(34.7%)	14.773**
	두명	120(50.6%)	759(57.7%)	230(57.8%)	1109(56.9%)	
	세명이상	31(13.1%)	114(8.7%)	20(5.0%)	165(8.5%)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2(17.7%)	304(23.1%)	142(35.7%)	488(25.0%)	49.961***
	광역시	88(37.1%)	422(32.1%)	87(21.9%)	597(30.6%)	
	경기	38(16.0%)	265(20.2%)	93(23.4%)	396(20.3%)	
	기타지역	69(29.1%)	324(24.6%)	76(19.1%)	469(24.1%)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가구원 수	3명이하	58(24.5%)	254(19.3%)	71(17.8%)	383(19.6%)	8.864
	4명	115(48.5%)	751(57.1%)	230(57.8%)	1096(56.2%)	
	5명	48(20.3%)	224(17.0%)	76(19.1%)	348(17.8%)	
	6명이상	16(6.8%)	86(6.5%)	21(5.3%)	123(6.3%)	
	전체	237(100.0%)	1315(100.0%)	398(100.0%)	1950(100.0%)	

***P< .001 **P< .01 *P< .05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으며 미취업자이 비중이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녀수와 자녀연령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계층별 재무구조의 차이

소득계층별 가계의 재무구조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자산상태와 가계수지상태, 그리고 다양한 재무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 가계자산상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가계자산상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총합계인 총자산과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개인적으로 빌린돈, 전세 및 임대보증금, 부어야할계 및 기타부채를 합하여 가계총부채를 산출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서 최종 순자산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2000년 현재 가계총자산은 약 1,182만원가량이고 부채총액은 1,914만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7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유자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은 구조를 나타났다. 중소득층에서는 가계 총자산규모가 2,018만원이고 총부채액은 1,382만원으로 순자산은 6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비해 부채보다 자산의 규모가 큰 안정적인 가계재무구조를 보여주었다. 고소득층의 자산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2000년 현재 가계총자산은 7,693만원, 가계총부채액은 3,778만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3,9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순

<표 4> 소득계층별 가계 자산상태의 차이

평균의 단위: 천원

항 목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 자산	금융자산(총액)						
	은행예금	456.14	1856.64	700.61	1872.69	1827.67	4280.89
	주식, 채권, 신탁	27.43	226.17	84.21	464.84	751.91	5221.16
	저축성보험	121.53	462.43	264.47	826.18	652.89	1449.39
	타지않은계	5.11	55.71	12.70	114.08	43.55	239.06
	빌려준돈	85.23	992.17	40.70	318.41	256.73	1293.88
	기타	.00	.00	11.77	290.04	65.33	1045.92
가계 부채	부동산자산(총액)						
	소유부동산(셋가)	119.41	952.72	380.61	2064.81	2388.44	13454.53
	전세/임대보증금	228.69	1127.40	247.23	1195.81	1008.54	2940.29
	보증금	139.45	731.65	276.15	1005.30	699.25	1800.54
	총자산	1182.99	3332.61	2018.45	3983.37	7694.31	18807.23
	금융기관	1184.47	3855.04	869.81	1883.58	2375.13	6088.24
	비금융기관	44.56	290.85	36.98	238.44	108.34	565.36
	빌린돈	318.52	930.82	171.83	726.77	285.18	1586.09
	전세금/임대보증금	334.51	1407.83	284.22	1282.46	992.71	2925.73
	부어야할 계	10.89	132.45	3.71	42.67	17.19	136.55
	기타	21.10	233.75	16.08	420.77	.00	.00
	부채총액	1914.05	4247.34	1382.64	2614.30	3778.54	7158.71
	순자산	-731.06	4783.55	635.81	4033.67	3915.76	16614.63

〈표 5〉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상태의 차이

평균의 단위: 천원

항 목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계소득	근로소득	432.66	338.99	1794.60	563.24	3937.66	1829.49
	금융소득	15.99	91.02	17.51	125.16	65.48	299.70
	부동산소득	10.04	61.77	8.27	73.84	50.60	292.41
	사회보험소득	11.78	88.41	2.65	32.45	22.78	194.77
	이전소득	47.40	124.67	12.75	91.16	13.43	135.05
	기타소득	7.22	50.41	16.85	113.13	149.90	570.49
	년간총소득	525.08	312.04	1852.62	542.08	4239.85	1909.47
가계지출	월평균생활비	74.46	45.85	111.80	44.51	189.66	84.06
	월평균저축액	5.59	23.04	25.03	27.25	86.06	108.69
	년간총지출	960.51	670.47	1641.99	587.41	3308.68	1751.84
가계수지		-435.43	780.97	210.63	432.33	931.16	1575.53

자산규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30.20$, $p< .000$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소득계층간 순자산 규모에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1년동안의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손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한 총소득을 산출하였다. 가계지출은 월평균생활비와 저축액을 합하여 년간총지출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가계수지상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저소득층은 년간 총소득이 525만원이고 년

간 총지출은 960만원으로 가계수지는 435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성을 드러냈다. 중소득층은 년간 총소득이 1,852만원, 가계지출은 1,641만원으로 가계수지는 210만원정도 흑자인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는 년간 총소득이 4,239만원이고 가계지출은 3,308만원으로 931만원정도의 가계수지흑자폭을 나타냈다.

소득계층간 가계수지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209.844$, $p<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고소득층이 가계수지가 가장 큰 흑자폭을 보인반면, 저소득층은 적자상태를 나타냈다. 즉,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지출

〈표 6〉 소득계층별 순자산과 가계수지 규모의 차이

평균의 단위: 천원

종 속	독 립	N	평균	F	Duncan
순자산	저소득층	237	-731.06	30.20***	a
	중소득층	1315	635.81		b
	고소득층	398	3915.76		c
가계수지	합 계	1950	1139.13		
	저소득층	237	-435.43	209.84***	a
	중소득층	1315	210.63		b
	고소득층	398	931.16		c
합 계		1950	279.17		

*** $P< .001$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적자상태라기 보다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필수적인 적자폭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자폭이 가계부채로 형성되어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계재무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통해 각 소득계층별 재무상황을 평가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총자산/총부채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 1보다 클 경우 부채지급 능력이 충분하며 1보다 적을 경우 부채상환불가능 상태로 평가된다. 각 소득계층별 평균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은 1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1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여 안정적인 재무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사후검증결과 소득계층간에 부채상환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산/순자산비율은 가계가 자산증식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율로서, 가계자산상태평가에서 주식, 채권, 신탁과 저축성보험, 타지않은계를 합하여 투자자산으로 산정한후 비율을 산출하였고 순자산의 25%이상이 적

<표 7> 소득계층별 재무비율의 차이

평균의 단위: 천원

		N	평균	표준편차	F	Duncan
총자산/총부채	저소득층	151	.77	2.12	11.46***	a
	중소득층	656	1.59	4.03		b
	고소득층	242	3.05	7.68		c
	합 계	1049	1.80	4.99		
투자자산/순자산	저소득층	197	.14	.59	.14	
	중소득층	1177	.24	3.76		
	고소득층	384	.16	.97		
	합 계	1758	.21	3.12		
연간총부채/ 총년간소득	저소득층	198	4.37	11.50	71.67***	b
	중소득층	1315	.77	1.52		a
	고소득층	398	.88	1.61		a
	합 계	1911	1.17	4.12		
주택외부채상황금/ 총년간소득	저소득층	198	3.20	8.91	60.25***	b
	중소득층	1315	.62	1.30		a
	고소득층	398	.65	1.45		a
	합 계	1911	.89	3.22		
유동자산/ 월지출	저소득층	236	5.59	20.84	1.73	
	중소득층	1312	5.28	13.24		
	고소득층	398	6.77	10.99		
	합 계	1946	5.62	13.99		
년간저축과 투자/ 년간총소득	저소득층	198	2.03	2.92	60.47***	b
	중소득층	1315	.93	.55		a
	고소득층	198	.93	1.82		a
	합 계	1911	1.04	1.37		

***P<.001

절한 투자자산규모로 평가하였다. 소득계층별 투자자산/순자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계층에서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는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자산을 충분히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간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은 연간 총소득중 가계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값이 클수록 부채부담이 크고 30%이하여야 안정적인 재무상태인 것으로 평가한다. 소득계층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평균은 4.37로 약 400%를 넘어서고 있어 가계의 부채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도 70~80%선으로 나타나 평균이상의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매우 심각하여 가계의 효율적인 소비지출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외부채상환금/총연간소득비율은 주택이외에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비율로서 20%이하가 안정적인 재무규모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소득계층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모든 계층에서 20%를 상회하고 있으나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3.20의 평균점수에 따라 약 300%를 넘어서고 있어 가계가 주택외부채상환금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가계가 당장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관련부채상환금을 제외하고 단시간내에 해결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도 연간총소득의 세배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저소득층 가계는 자녀의 사교육비지출과 같은 중요비목지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동자산/월지출 비율은 가계가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로서 가계저축을 제외한 월지출의 6배의 유동자산을 형성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가계운영규모로 평가된다. 소득수준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에서만 평균 6.77정도의 점수로서 약 월

지출규모의 6.7배가량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은 6배에 미치지 못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저소득층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예측되어 특히 가계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연간총소득에 비해 상환해야하는 부채의 규모가 매우높아 가계의 효율적인 지출 및 소비행동이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비해 중소득층은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자산증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간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았고 고소득층은 연간총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으나 부채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매우 커,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으며 가계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확보가 이루어진 재무상태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재무구조와 상태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재무구조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저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사교육비지출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과 재무관련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때, 재무관련특성변인으로는 자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순자산, 년간가계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수지, 가계재무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재무비율들을 주요 영향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735에서 2.275로 나타나 2의 값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유무

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값을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10이하의 값을 가짐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인구학적특성과 가계재무관련특성이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부의 연령($\beta=.364$), 순자산($\beta=.248$), 주부의 학력($\beta=.204$), 자녀수(.180)의 순으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26%였다.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의 영향요인을 통해 볼 때,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은 선택제를 넘어서 사치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한달평균 사교육비지출액은 45,738 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득층 133,182원, 고소득층 203,83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지출규모를 보였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가계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의해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에 큰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적 재화 및 서비스구입에도 충분한 재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재무관련요인보다는 사회인구학적요인들인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수준, 자녀수 등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볼 때, 사교육비지출이 선택제를 넘어선 사치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경우, 자녀또한 고학년에 재학중에 있음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어야할 사교육비지출이 연령이 어린 자녀보다는 그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적 필요성 인식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부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난것도 사치제적 인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많아지면 사교육지출에 따른 부담감에 의해, 사교육비지출을 포기하는 반면, 자녀수가 적다면 오히려 사교육적 필요성 인식이 높아진다고 볼때, 저소득층에 있어서 사교육비지출은 사치제적 성향이 강하다고 예상된다.

한편, 재무관련특성요인중에서 순자산이 유일한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가계의 재무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에 비해 부채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재무구조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야기된다고 볼 때, 재무관련특성중에 가계자산과 부채의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순자산의 규모가 사교육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측해 볼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가계수지가 아닌 순자산규모가 사교육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택제라기 보다는 사치제적 비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 중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중소득층가계의 사교육지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관련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중소득층의 경우, 가계수지($\beta=.703$), 순자산($\beta=.471$), 연간총부채/총년간소득($\beta=-.328$), 자녀수($\beta=.326$)의 순으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가계수지가 흑자일수록, 순자산규모가 많을수록, 년간총소득에 비해 부채가 차지

〈표 8〉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상수)	-34.142**	
	주부의 연령	1.211***	.364***
	주부의 학력	3.172**	.204**
재무관련 변인	순자산	.01935***	.248***
	자녀수	-5.489**	-.180**
Adjusted R ² (R ²)		248(264)	
F		17.191***	

***P< .001, **P< .01

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7%정도였다.

중소득층가계의 사교육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과 달리, 사회인구학적요인보다는 재무관련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때, 중소득층가계는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가계재무구조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선택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교육비지출이 필요하나 가계의 가치분소득이나 가용자원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득층의 경우,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순자산규모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고 년간소득에 비해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안정적인 재무상황일수록 자녀의 사교육지출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소득계층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득층의 사교육지출이 가계의 재무구조와 상태를 고려하고 필수적 비목지출에 의해 탄력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가 과열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교육시장의 사회문제적 인식과 비교해볼때, 가계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9〉 중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상수)	12,393***	
	자녀수	2,597**	.326**
재무관련 변인	순자산	.059**	.471**
	가계수지	.054***	.703***
	연간총부채/총년간소득	-.113*	-.328*
Adjusted R ² (R ²)		.475(.516)	
F		12.785***	

***P< .001 **P< .01 *P< .05

6. 고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고소득층가계의 사교육지출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0〉과 같이 나타나고소득층의 경우, 주부의 연령($\beta=.236$), 주부의 학력($\beta=.105$), 주택외부채상환금/총년간소득($\beta=-.082$), 년간저축과투자/년간총소득($\beta=.078$)의 순으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주택외부채상환금이 낮을수록, 연간총소득에 비해 저축과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고소득층 가계의 월평균사교육비지출액은 약 203,830원으로 2000년도에 이루어진 사교육비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이승신, 2002; 이성립, 2002)와 비교해 볼때, 매우 큰 지출규모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사교육비지출행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중에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이 매우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을 볼때, 고소득층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경우 자녀가 고학년일 가능성이 큼에 따라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 사교육은 필수재로 인식할 가능성 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10〉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상수)	-5,643	
	주부의 학력	.957*	.105*
	주부의 연령	.361***	.236***
재무관련 변인	주택외부채상환금 /총년간소득	-.445	-.082
	년간저축과 투자 /년간총소득	1,079	.078
Adjusted R ² (R ²)		.156(.164)	
F		7,595***	

***P< .001 *P< .05

또한 재무관련변인중에서는 가계소득에 대한 주택 외부채상환금이나 연간 저축과 투자의 비중이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을 볼때, 고소득층에서는 자녀 사교육비지출이 필수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인적자본이론에서 자녀교육비지출을 인식하는 바와 같이 투자행위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수익을 예측함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어져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효율적인 가계경제의 기반아래 사교육지출행동을 이루기 위해 각 소득계층별 가계사교육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었으며 최종 조사대상자로 1950가계를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도구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형태 및 상태, 주거형태, 거주지역, 가구원수, 자녀수 등을 선정하였고 재무관련변인으로는 가계자산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순자산, 가계수지의 흑자 혹은 적자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수지 및 재무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재무비율로 총자산/총부채, 투자자산/순자산, 연부채상환금/총년간소득, 주택외부채상환금/총년간소득, 유동자산/월지출, 연간저축+투자/총년간소득 등을 영향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가계사교육비지출은 공교육비지출이외에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들에서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한달평균금액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조사도구를 spss win 10.00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상대적 빈곤선에 기준을 두고 소득계층을 구분한 결과, 중산층이 66.6%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월평균소득

은 152만8천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21.2%정도로 평균월소득이 351만7천원, 저소득층은 12.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은 43만5천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으며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녀수와 자녀연령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예측되어 특히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연간총소득에 비해 상환해야하는 부채의 규모가 매우 높아 가계의 효율적인 지출 및 소비행동이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득층은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자산증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간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았고 고소득층은 연간총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으나 부채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매우 커,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으며 가계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확보가 이루어진 재무상태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넷째, 저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26%였다.

다섯째, 중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계수지가 흑자일수록, 순자산규모가 많을수록, 연간총소득에 비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지출중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

하는 정도는 약 47%정도였다.

여섯째, 고소득층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주택외부채상환금이 낮을수록, 연간총소득에 비해 저축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6%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소득계층별로 사회인구학적특성이나 재무관련특성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결국 가계의 사교육지출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소득계층에 따른 현격한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보이며 특히 재무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매우 큼에 따라 사교육지출비목이 서로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저소득층에서는 가계지출비목중 자녀 사교육비지출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중요 영향요인으로 볼 때, 선택재를 넘어서 사치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재무관련요인중에 순자산이 사교육지출에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저소득층은 가계의 가치분소득이나 자산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계부채를 줄여 재무구조적인 부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계 사교육에 대해 안정적인 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저소득층에서는 가계부채뿐 아니라, 가계수지측면에서도 적자폭이 매우 큰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가계가 소득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부채부담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때, 저소득층가계는 지나친 부채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사교육지출비목이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저소득층가계와 중소득층, 고소득층간에 사교육지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계층간 자녀교육 효과의 격차로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의 공교

육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자녀를 위한 저소득층가계의 교육적 보조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적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가계의 공공적인 교육보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류계층의 사교육지출은 사회인구학적특성보다는 재무관련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교육지출비를 대표적인 가계의 선택재로 인식하여 가계수지와 순자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전체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과열과 맹목적인 비목지출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있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특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소득층 가계가 사교육비지출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나 가계경제적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소득계층중, 중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득층의 사교육비지출 규모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이 비목지출이 재무구조적특성뿐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선택재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고소득층가계 사교육지출은 저소득층가계의 약 5배 이상에 이루고 있고 재무관련특성중 주택외부채상환금/총년간소득이나 년간저축과 투자/년간총소득과 같은 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지출은 가계투자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고소득층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지라도, 투자행위로 인식하는 자녀사교육비지출이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사교육비지출의 병폐를 두드러지게 하고 계층간에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사회적으로 일부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액과외나 지나친 사교육비지출현상은 고소득층에서 자녀교육을 그 필요성이나 재무적 환경에 따라 탄력으로 지출하기 보다는 미래의 예상수익을 고려한 투자행위로 인식

하는 경향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의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적인 소비를 주도하는 고소득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계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가계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의 중요영향요인으로 재무구조적인 측면이 검증되었다. 특히,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규모와 행위는 소득뿐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사회전체가 과열 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저소득층가계의 사교육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뭄시 낮게 나타나 계층간의 위화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간 사교육비지출격차의 상당부분이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습이나 예체능활동을 제공하고 사교육 수업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본 연구는 가계의 사교육지출행동과 관련하여 사교육비지출만을 살펴보았으나 지출뿐 아니라 사교육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다른 지출비목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재무구조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시계열적 접근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인희(2001).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 행. 제3회 한국노동패널.
-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 김시월,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 김 옥(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김진옥, 박창원(2001).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 제3회 한국노동패널.
- 김현철, 김홍주, 한유경(1999). 한국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회지, 37(4).
- 김혜선, 배미경(2001). 가계재무관리. 학지사.
- 나영미, 윤정혜(1999).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 대한매일(2000). 2001년 2월 16일 7면.
- 류상영, 강석훈(1999). 종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문숙재,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5).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학(1992). 고교생 과외비용, 서민가계에 주름살되고 있다. 국민경제리뷰, (25), 6-25.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8(2).
- 연합뉴스(2002). 2002년 5월 23일.
-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

- 모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 비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 외(1997). 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대교육연구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9). 소비자재무설계론. 학지사.
- 이동원 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불 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1996). 가계경 제학. 학지사.
-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학지사.
-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신정.
- 정영숙(1996a). 가계의 교육비지출과 선별가설-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 정영숙(1996b).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6-85.
- 제3회 한국노동페널학술대회(2001). 한국노동연구원
- 최승애(1986).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변 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일보(2001). 2001 11월 13일 사회면.
-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비측정-출생 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 황순덕(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Becker, G.S. (1993).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
- Espenshade, T.J. (1984). *Investing in children-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Garman, E.T. (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Lino, M (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 _____. (1990). Factors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191-201
- Schwenk, F.N. (1986).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4).
- Turchi, B.A. (1979). *The monetary cost of a child: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co.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003년 6월 26일 접수, 2003년 10월 17일 채택)